

공 개



의안번호	제 48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3. 2. (제 4 차)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고 승 범
제출 연월일	2022. 3. 2.

1. 의결주문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송무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규정을 현행 행정소송 체계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수임료 증액, 소송사건기록 제출,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금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가송무체계 개편사항 반영(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등)

국가송무체계 개편 사항(법무부, '20. 12.) 반영하여 행정소송 관련 사전협의 대상을 관할 검찰청의 장에서 법무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별지 서식을 개정하는 등 기존 규정을 정비함

나. 소송사건기록 제출 규정 마련(안 제2조, 제11조의2)

소송 제기 시 상당한 기간 내에 소송총괄관으로 하여금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의 장,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건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요청을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상당한 기간 내에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기록을 제출하도록 규정함

다.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규정 마련(안 제23조의2 신설)

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경제적 무자력 등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송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포기를 법무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수임료 증액 규정 마련(안 제8조)

이미 수임계약 체결했으나 소송 장기화 등으로 인해 수임료를 증액할 필요가 있을 경우 소송위원회 의결을 통해 수임료를 증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완료(규제심사 비대상)

라. 2022년도 제4차 금융위 안전소위('22.2.24.) 심의필

마.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정변경예고기간('22. 1. 28. ~ '22. 2. 8.)

3) 특이사항 없음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의2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의 장“이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정 요청한 제재 안건 소관 금융감독원 부서의 장 또는 관련 기록물 관리 부서의 장을 말한다.

9. “소송사건기록“이란 금융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 관련 제재 안건 및 그 근거가 되는 증명서, 확인서, 의견서, 문답서 등 자료와 그 목록을 말한다.

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등을 이미 선임한 소송사건이더라도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금융정책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 소송 기간, 그 밖의 사정변경 등을 고려하여 소송위원회 의결로 수임료를 증액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라 체결된 소송사건의 수임료를 증액하는 경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를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로, “관할 검찰청의 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소송사건기록의 제출) ① 소송총괄관은 소장 부분 송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소관부서의 장 및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건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해당 소송사건기록을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사건기록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관은 소송사건기록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제출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⑤ 소송총괄관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사건기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소송사건기록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목록은 비공개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관할 검찰청의 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를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으로, “관할 검찰청의 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검찰청의 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의견서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를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으로, “관할 검찰청의 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중 “관할 검찰청의 장”을 각각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관할 검찰청의 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관할 검찰청의 장”을 각각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승인신청서”를 “지휘신청서”로,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제출”을 “법무부장관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지휘를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승인서”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지휘”로 한다.

제2장제4절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소송비용의 회수의 예외)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포기 지휘를 요청할 수 있다.

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 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로 지정된 경우
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해당 세관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되었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가 극히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제목 중 “승인신청서”을 “지휘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 료 목 록

번호	자료명	내용	소관 부서	참고 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u>7의2.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의 장"이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정 요청한 제재 안건 소관 금융감독원 부서의 장 또는 관련 기록물 관리 부서의 장을 말한다.</u>
8. (생 략) <u><신 설></u>	8. (현행과 같음) <u>9. "소송사건기록"이란 금융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 관련 제재 안건 및 그 근거가 되는 증명서, 확인서, 의견서, 문답서 등 자료와 그 목록을 말한다.</u>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등을 이미 선임한 소송사건이더라도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u>

제11조(소장의 접수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 소송총괄관 및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

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금융정책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 소송 기간, 그 밖의 사정변경 등을 고려하여 소송위원회 의결로 수입료를 증액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라 체결된 소송사건의 수입료를 증액하는 경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제11조(소장의 접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③ -----

-----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
--- 법무부장관-----

장 접수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신설>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소송사건기록의 제출)

① 소송총괄관은 소장 부분 송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소관부서의 장 및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건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해당 소송사건기록을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사건기록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관은 소송사건기록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제출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⑤ 소송총괄관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사건기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

제12조(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①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은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고, 답변서 사본을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3조(소송진행상황의 보고) ①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참석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에 법원에 기 제출된 주요 소송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 소송총판관 및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한다.

② (생략)

제14조(판결선고 후 처리) ① (생

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소송사건기록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목록은 비공개로 한다.

제12조(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① -----

----- 법무부장관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소송진행상황의 보고) ① -----
-----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 법무부장관-----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판결선고 후 처리) ① (현

략)

②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 항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항소제기 여부를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상소 제기·포기의견서

2. ~ 3. (생략)

제15조(판결확정에 따른 종결) 소송수행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과 소송총괄관,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제16조(항소심) ① 소송수행자는 검토결과 항소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

행과 같음)

② -----

----- 법무부장관-----

--.

1.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의견서

2. ~ 3. (현행과 같음)

제15조(판결확정에 따른 종결) --

-----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 법무부장관-----

-----.

1. · 2. (현행과 같음)

제16조(항소심) ① -----

----- 법무부장관-----

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항소
장을 제출하여 항소제기를 하여
야 한다.

② (생략)

③ 소송수행자는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 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은 항소장을 첨부하여 송달일
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의
장, 소송총괄관 및 소관부서의
장에게 항소장 접수보고를 하여
야 한다.

제18조(상고심) ① 소송수행자는
검토결과 상고제기가 필요하
다 고 판단한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
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고등법원에 상고
장을 제출하여 상고하여야 한
다.

②·③ (생략)

제20조(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

① (생략)

②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등 신
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수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법무부장관 -----

-----.

제18조(상고심) ① -----

----- 법무부장관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21조(결정서 송달 등) ① 소송
수행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
할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항고제
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즉시항고를 지휘한 경우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각각 전자소송시스
템을 통하여 관할 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2조(소송비용확정 재판 등) ①
(생략)

② 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
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확
정된 후 최종 확정된 날부터 10
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소
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에 영수증 등 소
명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검찰청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호서식-----

-----.

제21조(결정서 송달 등) ① -----

----- 법

무부장관-----

---.

② ----- 법무부장관---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소송비용확정 재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휘신청서 -

----- 법무부장관에

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지

③ 소송수행자는 해당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승인 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④ ~ ⑥ (생략)

<신설>

회를 요청-----.

③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 지휘-----

--.

1. ~ 4.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소송비용의 회수의 예외)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소송비 용액 확정 결정 신청 포기 지휘를 요청할 수 있다.

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 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 정청이 당사자로 지정된 경우

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소송수행자 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 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해당 세관에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
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
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
명되었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송비
용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
수가 극히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
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
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2-2100-2809